

전남 작은 학교들 '고교학점제' 걱정 태산

내년 전면시행...과목 많아져 교사 업무 늘고 학생 내신 등 불이익 우려 교육청 시간강사 지원 방침에도 문제 해결 난망...도농 교육격차 확대

'고교학점제'가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광주·전남 교사와 학부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전남도 교육청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남 지역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교사들은 업무가증을 우려하고 있고 광주·전남 학부모들은 내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에 해당하는 전남 지역 고등학교는 18곳으로 전체 전남 고등학교의 12.5%를 차지한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사범적으로 운영되던 고교 학점제가 내년 3월 학교 개학시부터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생들이 스스로 수강신청하듯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 흥미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생들은 3년간 192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과목당 수업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및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만족해야 이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선택 과목만 140여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남지역 작은 학교는 선택과목 개설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도시학교에 비해 교사가 적고 전문강사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고교학점제 취지와 달리 작은 학교의 경우 인

력공간의 한계 탓에 선택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광주·전남도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시간강사를 지원하고 온라인학교를 활성화할 것이라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작은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작은 학교는 점차 증가하는 탓에 교원 수도 덩달아 감축되니 도농간 교육격차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설명이다.

전남지역 작은학교에 근무중인 윤모(45) 교사는 "작은학교 교사들은 이미 2~3과목을 맡고 있어 아무리 학생들이 원해도 여러 교과를 개설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학생들에게 희망 과목 신청을 받지만 결국 개설할 수 있는 과과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국·영·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 담당 교사가 한

명씩이라 이미 여러 과목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다과목 지도 부담이 커져 작은학교 교사들의 업무가증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은 학교에 근무중인 A교사는 "여러 과목을 담당하면 수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험과 과목당 2~3개의 수행평가도 해야한다"며 "작은 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적어도 해야할 행정 업무 등은 정해져 있어 교원 한 명당 업무 부담이 큰편인데 고교학점제까지 시행되면 다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선택권과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인근 학교와 연합해 과목을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온라인학교를 활성화해 다양한 과목을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수업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프라가 부족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

강사 인력풀을 활용해 시간강사 채용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작은 학교가 주로 농산어촌에 위치해 시간강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부분 정년 퇴직한 교사에게 알음알음 부탁해 맡겨야 하는 처지인데다, 시간강사가 들어와도 행정업무는 맡지 않기 때문에 기존 교사들의 업무 강도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작은 학교의 경우 한 과목당 수강자 수가 적다보니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대입에 내신,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도 나온다.

중3 자녀를 둔 정모(여·47·광주시 남구 봉선동) 씨는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입시 전략이 복잡해지니 주변에서는 아이 입학 전부터 어떤 과목이 진학에 유리할지 따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학교별 격차가 커지니 '차라리 외고나 특목고가 낫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법원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의 4배 서울법원 5·18 위자료 판결 최종확정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와 관련, 광주법원이 산정한 손해배상보다 최대 4배 가량 많은 위자료를 인정한 서울법원의 판결(9월 30일자 광주일보 6면)이 최종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대법관 노태약)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부는 이들 원고에게 총 430억 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연행·구금·수형의 관해 수금일수 1일당 30만원을 위자료를 산정하고, 장애가 있는 경우 14등급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함에 따라 1500만원씩을 더하는 방식의 위자료를 산정했다.

노동능력 상실 100% 장애등급인 1~3등급의 경우에는 3억 1500만원이 산정된다. 장애가 남지 않는 부상자의 경우 500만원의 위자료를 기준으로 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는 그동안 광주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보다 최대 4배까지 많은 액수다. 1심 재판부는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됐고, 그동안 경제상황과 화폐가치가 변한 점,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를 지급해 5·18 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원고의 위자료를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심에서 인정한 액수보다 증액하기도 했다.

정부는 다른 사례에 비해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법원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양산호 수초 제거
광주시 북구 양산호수공원에서 최근 광주시 북구 직원이 쾌적한 도심 환경 제공과 연못 생육 환경 조성을 위해 수초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투망작업하던 선원 3명 바다 추락...2명 사망

신안서...사고 원인 조사 중

신안 새우잡이 어선에서 작업중이던 선원 3명이 바다로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30분께 신안군 임자도 북방 4km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어선 A호(16t, 7명 탑승)의 선원 3명이 바다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로 추락한 3명이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중 2명이 숨졌다.

이들은 이날 새우잡이를 위해 어망을 바다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배 시설물에 걸리면서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당시 파도는 1.5~2m 정도의 상황이었다.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와 무관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사무장병원 차려 보험급여 타낸 경찰간부 기소

수십억원 부당이득 취한 혐의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가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에 넘겨진지 1년 3개월만에 기소가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의료

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순천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기소했다.

A 경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남의 한 지역에서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찰에 2022년 '불법 사무

장병원'의 의심된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다. A 경감은 현재 직위해제 중이다.

A 경감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운영 중인 병원이 입주한 건물을 사들였을 뿐이며 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련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무장 병원이란 무자격자의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선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